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21개공사 턴키 발주 확정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21개 공사에 대한 발주 방식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8~19일 이틀간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4대강 살리기 관련 공사 71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21건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영산강의 경우 ▲서창 6공구 하천정비사업 등 광주시 남구 승촌동~광산구 우산동 일대 22.6km(공사비 3천306억원) ▲다시 2공구 하천정비사업 등 나주시 다시면~황평군 엽다면 일대 12.2km(공사비 1천678억원)로, 사업비는 4천984억원(보상비 포함)이다. 나머지 50건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된다.

이번에 심의된 공사는 이달안으로 예정돼 있는 1차 발주 물량에 2차 발주(10~11월) 공사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며 나머지 2차 발주 물량에 대한 심의는 9-10월경 이뤄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시 홍보 UCC

대상작 표절 논란

광주시 홍보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 대상작에 대한 자기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원래대로 광주 UCC'를 전국공모해 서울 모 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정모씨의 작품을 대상 수상작으로 최근 결정했다. 대상작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씨의 작품은 지난해 정씨 자신이 국제청에 출품해 최우수상을 받은 '근로장려 세계 UCC'와 콘텐츠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두 작품 모두 도미노를 기본 소재로 활용했으며, 영상 중간에서 국제청의 로고가 광주 시청의 로고로 대체된데 이어 영상 마지막 부분에 회장의 메시지로 하트모양이 그려지는 것도 흡사하다.

정씨는 광주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같은 작품을 중복 제출한 것이 아니라 주제와 내용을 바꿔 새롭게 촬영했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주장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 UCC 작품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을 조만간 소집해 표절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상 수상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강운태 복당 반대"

민주당 광주 남구위원장

이윤정 민주당 광주 남구지역위원장은 19일 "원칙이란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며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에게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탈당과 복당을 반복해온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와 맞서 싸우는 등 끊임없이 민주당을 부정해왔던 인사"라며 "통합도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만 정당 발전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입당과 탈당을 밥 먹듯이 한 인사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4대湖 농업용수 공급 제한

<장성·나주·담양·광주>

## '도내 가뭄 심화' 저수율 평균 28%...평년보다 33%p ↓

### 농어촌공 전남본부, 20~24일 공급 중단 후 7일간 급수

장성·나주·담양·광주 등 4대호 농업용수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들 댐의 저수율이 크게 낮아진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0일부터 장성·나주·담양·광주 등 4대호 농업용수를 제한적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이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가 관리하는 1천41곳의 저수율이 평균 40%이고 4대호의 평균 저수율은 28%로 평년보다 33%포인트나 낮을 정도로 가뭄이 심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농어촌공사는 설명했다. 이들 4대호의 수계지역은 광주시 남구와 북구, 전남 나주, 담양, 장성, 함평, 영암 지역 등 3만5천여ha에 달한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지역본부는 모내기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20일부터 5일간 물 공급을 끊은 다음에 7일간 급수하는 형태로 진행할 방침이다. 4대호 단수 기간에는 보조 수원공인 소규모 저수지와 취입보, 양수장, 관정 등을 이용해 모내기를 끝낸 논에 보충급수를 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배수로와 하천에서 직접 논에 보충급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수량이 부족하므로 지역 농민들은 물고 단수로 낭비되는 물을 방지하고 물을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기업 457억 광주 투자협약 박광대(왼쪽에서 여섯번째) 광주시장이 19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수도권 기업투자환경설명회'를 가진 뒤 스위칭 전문생산기업(주)오리엔텍 등 수도권 10개 기업과 457억원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특목고도 입학사정관제 허용"

## 안병만 교과부장관

대학에 이어 특수목적고도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 신입생을 뽑게 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9일 한국 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제3차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특목고에서 입학사정

관제를 한다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대학이 개성과 창의성, 수월성이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인데 고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학생이 공부 이외의 것을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용한다면 수월성 등을 갖춘 훌륭한 학생을 만들 수 있다"며 ""

입학사정관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입학사정관이 여러 가지를 놓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 양성과 관련, "이를 위해 올해에 입학사정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도 확대·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F1 채무보증동의안 전남도의회 통과

내년 10월 영암에서 열릴 '포틀러(F1) 대회'에 필요한 '금융차입에 따른 채무보증 동의안'이 19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4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F1대회 운영법인 카보(KA-VO)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차입에 따른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등 7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7가지 의안 중 '유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가지는 찬반투표 없이

가결됐다. 'F1대회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34명 중 18명만이 찬성하고 3명은 반대, 13명이 기권해 겨우 가결됐다. 'F1대회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F1대회에 대한 경주장 시설비 일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예상되면서 카보의 PF에 대한 전남도의 채무보증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채무보증 내용 변경을 요청하고 제출했다. 이날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초 3천400억원이었던 PF 금융차입 규모는 1천980

억원으로 축소됐고, 이로 인해 전남도의 PF 채무보증액도 980억원에서 571억원으로 변경됐다. 'F1대회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진 것은 도청 집행부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에 사전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일부 의원이 반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의원들의 윤리의식과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다음달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최원일기자 cki@

## 시 설

### 지역제품 외면하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해야

지역 제조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두 번 울고 있다고 한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기가 쉽지 않고, 입점을 하더라도 높은 수수료와 운영비 등을 요구해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제조업체를 대하는 행태를 보면 황포에 가깝다. 공급 단가를 후려쳐 업체로 하여금 입점을 포기하게 한다. 또한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관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 3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지역업체는 겨우 20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역의 돈만 끌어다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는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지역이 아닌 서울로 유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품의 안정된 판매망이 확보돼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상권을 장악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제품을 외면한다면 지역 제조업체의 쇠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는 반드시 일정 비율의 지역상품 판매장을 갖추도록 강제해야 한다.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해 지방세 납부 규모를 확대하고, 법인도 지방 현지 독립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소비자 운동을 지역이 아닌 서울로 유출하고 있다.

### 지역인재 유출 막을 특단대책 필요하다

성적이 우수한 광주지역 중학생들이 타 지역의 특목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인재들을 광주에 유치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빼앗기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77명(전체 중학교 졸업생 대비 1.33%)에 불과하던 광주의 타 시·도 우수 중학생 유출자 수는 2006년 333명(1.60%), 2007년 346명(1.52%), 2008년 414명(1.74%)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시 교육청 개청 이후 최초로 2%를 넘어선 509명(2.16%)이 광주를 떠났다. 이들은 고교 진학사 내신 1등급으로 추정되는 중학생으로, 고교에 진학해 성적이 이어갈 경우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인재들이다. 우수 중학생의 역유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들이 선호하는 교육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어고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도 전무한 실정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자립형 사립고가 없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지역 학생들은 수능성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어 전국에 광주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는 일선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돼 얻어낸 값진 결실이다. 그런데 지역의 인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교육당국은 공교육 강화와 함께 자사고 설립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 지역을 떠나는 우수학생들이 늘어나는 한 '실력광주'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정세균 "법무부, 盧 전대통령 구속 시도 의혹"

민주당 정세균(사진) 대표는 19일 법무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표적·기획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안양교도소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 전 일제 입감에 대비해 독방을 설치하려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를 보면 이번 수사는 정권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표적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불구속 입장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구속을 시도

했던 것이 아닌가"며 "그런데 전직 대통령 구속은 법무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분명 더 높은 곳에 교감 내지는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와 국민이 믿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 서거는 정치보복에 의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라며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박재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해야"

한나라당 박재순(사진) 최고위원은 "발작물 등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전남도에서 발작물(농작물 재배), 축산 등에 대해서는(양곡 생산) 작물의 경우처럼 농사용 '갑' 전기 요금을 적용받도록 지경부와 한전에 요구했으나, 타 농사용 고과과의 형평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당이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농업 정책에 반영해 이를 개선해달

라"고 요구했다. 그는 "농업용 전기요금 체계는 갑, 을, 병 3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발작물과 과수, 축산 관련 농사용 요금 체계는 모두 '병'으로 분류돼 논 작물에 비해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사용 전력 '병'은 기본요금 1천70원인데 비해 '갑'은 340원, '을'은 930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 빛의만평

- 김중두



다른건 촉구처럼 왜 안돼지?!

## 美 'WMD 의심 北 선박' 추적

<대량살상무기>

### 미안마행 '강남호'

미국 군 당국이 미사일 혹은 핵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국적선 '강남호'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 선박 강남호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출항했으며, 미 군당국은 출항 시점부터 이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이 이뤄진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미군 고위 당국자는 "이 선박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강남호는 과거에도 확산활동에 연루된 선박으로 '재발'이라고 표현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의심되는 선박에 '강제' 승선, 검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 군당국은 강남호가 연료급유를 위해 기항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군은 강남호가 특정국의 항구에 기항할 경우, 해당국 정부에 연료공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은 그간 자국 선박에 승선, 검색을 하는 행위를 '전공'으로 간주하고, 백배전배의 보복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놔왔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91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